



2025학년도 수능대비 P&L COLLEGE 모의고사
[해설지]

[출제 및 해설]

kdwkdw0927@naver.com

* 출제자 성명은 출제자 이메일로 같습니다.

P&L COLLEGE 모의고사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6	①	2	11	⑤	3	16	⑤	2
2	⑤	2	7	②	3	12	③	3	17	④	3
3	②	3	8	①	2	13	①	2	18	②	2
4	③	3	9	④	3	14	③	2	19	⑤	3
5	③	3	10	②	2	15	④	2	20	④	3

* 주요 문항(3점 문항+a)을 제외한 문항들은 지문 해설과 정답 해설만 제공합니다.

1. ④

지문 해설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고,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답 해설

④ 아파트 구성원 간 갈등조정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2. ⑤

지문 해설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해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②

지문 해설

주민의 대의 기관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지닌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B는 지방 의회이다.

㉠과 ㉡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은 광역 자치 단체이고 ㉠에 속한 ㉡은 기초 자치 단체이다.

정답 해설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서로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으므로 ㉠과 ㉡의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③ 지방 의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지방 의회의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지방 의회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③

지문 해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는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해설

③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국민 선거’가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갑국과 달리 대통령제인 을국의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는 평등 선거원칙을 지킬 것이다.
(애초에 갑국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국민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 ② 행정부에 대해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각 불신임권이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갑국과 달리 을국에 해당한다.
- ⑤ 책임 정치 구현에 용이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따라서 갑국에만 해당한다.

5. ③

지문 해설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기각이 이루어진 뒤 갑은 (가)를 청구했으므로, (가)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해설

- ㄱ. 법원의 모든 결정과 판결은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과 달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 중 재판이 중지되지 않으므로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갑은)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 조항을 전제로 한 재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ㄴ. 헌법재판소는 □□조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조뿐만 아니라 □□조에서도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피해가 최소한으로 그치지 못했다.”라고 했으므로 □□조가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갑의 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과잉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만 나와 있을 뿐,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단은 나와 있지 않다.
추가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사용되는 원칙인데, 갑은 ○○조를 기본권 제한의 취지로 청구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또한 ○○조의 기본권 제한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

6. ①

지문 해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이다.
공익보다 집단의 사익을 중시하는 C는 이익집단이다. 나머지 B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해설

①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국민 선거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할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대의제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7. ②

지문 해설

탄핵 소추권이 있는 국가 기관인 A는 국회이다.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의 직무에 관한 감찰 권한이 있는 B는 감사원이다.
임명을 위해 누군가(D의 장(長))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모두 필요한 C는 대법관이고,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D의 장(長)은 대법원장이므로 D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E는 대통령이다.
참고로, 일반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C와 D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정답 해설

ㄱ.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
ㄴ. 감사원과 달리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법성 및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을 지닌다.

오답 해설

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관은 파면될 수 있다.
ㄷ. 권한 쟁의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헌법상 국가 기관 전체에 해당한다.

8. ①

지문 해설

A는 책임, B는 위법성(을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함.)
나머지 C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정답 해설

①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위법성의 조각’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된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위법성이 아닌 ‘조각’이다.)
④ 범죄 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이후 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만약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선지와 반대의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9. ④

지문 해설

[의회 의원 선거]

우선 지역구 의원 의석수는 200석이다. ‘***’을 보면 선거구마다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은 최대한 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할 수 있다.

즉, 선거구가 200개라면 각 정당의 최대 지역구 의석수는 200석일 것이고, 100개라면 100석일 것이다.

그런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A당이 지역구 의석수 109석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고 한 <1안> 은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될 수 없고,

20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2안> 에 따라 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전체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석)	109	73	8	10	200
비례대표 의석수(석)	61	128	9	2	200
전체 의석수(석)	170	201	17	12	400
전체 의석률(%)	42.5	50.25	4.25	3	100%
과소/과대 여부	과대	과소	과소	과대	

[행정부 수반 선거]

단순 다수 대표제에 따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유권자 집단에 따른 행정부 수반 선거 결과를 보면 후보자 a와 후보자 b가 모두 40그룹의 표를 얻음으로써 최다 득표자 2인이 나오게 된다. 지문에 따라 선거비용을 더 많이 사용한 후보자 a가 최종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 당선된다.

정답 해설

④ 선거 결과에 따르면 의회에서 B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지만, 행정부 수반으로 A당 소속인 후보자 a가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으로 둘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마다 2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1안>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행정부 수반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a가 맞지만, 의회 의원 선거에서 채택된 선거 제도는 <1안> 이 아닌 <2안> 이다.

③ 과대 대표된 정당은 A당, D당으로 2개이고, 과소 대표된 정당은 B당, C당으로 2개이므로 수는 동일하다.

⑤ ㉠의 방식은 선거구 법정주의와 선거 공영제 어떠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선거 공영제의 의미 중 ‘선거비용’이라는 키워드가 겹침을 가지고 만들어 낸 선지이다.

(+) 선거구 법정주의와 선거 공영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개념을 다시 슬쩍 봐보자.

10. ②

지문 해설

A는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해설

② 국제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A)이다.

오답 해설

⑤ 총회의 의결방식은 현실주의적 관점(A)이 아닌 자유주의적 관점(B)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1. ⑤

지문 해설

갑과 병은 16세로 미성년자이다.

갑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연소자에 해당하며, 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해설

⑤ 갑이 무와 합의하여 수요일에 21시까지 더 근무하고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금을 받는다면, 갑은 수요일에 1시간 30분의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갑은 연소자이므로, 하루에 최대 1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된다. 따라서 무에게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금을 받더라도, 연장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오답 해설

① 지문 중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보면, 갑과 병이 계약하면서 갑이 병에게 병의 법정 대리인인 정 의 동의를 요청했음이 제시되어 있다. 즉, 갑은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병이 제시한 정 의 동의서가 위조된 경우는 취소권 배제 상황에 해당하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은 이미 유효하므로 갑은 정에게 계약의 추인 및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③ 갑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이 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문 중 갑과 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보면 갑이 무에게 을의 동의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게 아닌 경우, 을은 갑과 무의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갑의 을의 동의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취소권 배제 상황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즉, 모든 경우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과 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휴게 시간은 30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다.

(+)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2. ③

정답 해설

③ 을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따라서 을의 직원인 무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문의 마지막을 보면 정의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의 무를 폭행하여 무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정의 가해 행위와 무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정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의 무에 대한 폭행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민법상 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과 무는 서로에 대해 고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 해설

①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만, 보수 공사 계약의 내용은 3일 뒤에 실현되므로, C는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이 무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므로, 무의 피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즉, 공작물의 소유자인 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는 병에게 어떠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불법 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⑤ A와 B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은 모두 법정 감독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3. ①

지문 해설

A는 청구권이다.

정답 해설

① 청구권은 재판 청구권과 배상 명령 청구권을 포함한다.

14. ③

지문 해설

갑, 정과 달리 13세인 병은 공소 제기와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촉법 소년)
갑과 병은 경찰관 무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정답 해설

- ㄴ. 병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므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 ㄷ. 무는 갑과 병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므로 체포할 당시 체포 영장이 없었을 것이다. 반면, 정에 대한 체포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어 체포가 이루어지고,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포할 때 영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오답 해설

- ㄱ.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병과 달리 17세인 갑은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어 공소 제기과 형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재판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는 없다.
- ㄹ. 정은 14세로 공소 제기과 형벌의 대상이지만, 검사는 병에 대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문에서 갑이 정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절도를 강요했음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했기 때문에 검사는 정의 범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인지 '죄가 안됨'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 처분인지 확정할 수 없다.

15. ④

정답 해설

④ 갑에 대해 2심 법원과 1심 법원 모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므로, 갑은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구속되었더라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구속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사법 경찰관인 무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속 영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다.
-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인 갑이 공소 제기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다.
- ③ 2년 동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을의 항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갑)과 검사이다.
-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을은 갑과 병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피해를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으로부터는 절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16. ⑤

지문 해설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해설

⑤ 타인을 살해할 것을 급부로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17. ④

지문 해설

갑은 A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만 기각했으므로,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과 □□행정법원의 판단은 생략되어 있으나, 이후 과정을 통해 생략된 부분을 알 수 있다.

□□행정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갑의 근무 지시 불이행’이 확인됨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다고 했으므로, □□행정법원은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법원의 모든 판결을 파기한 □□고등법원은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A 회사가 상고하였고, A 회사 혼자의 상고만으로 대법원이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두 심리하고 있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것은 A 회사 혼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복한 주체가 A 회사이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위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지방 노동 위원회	○	×
	A 회사 불복, 재심 청구	갑 불복, 재심 청구
중앙 노동 위원회	○	○
	A 회사 불복, 소송 제기	
□□행정법원	×	×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불복, 항소	
□□고등법원	○	○
	A 회사 불복, 상고	
대법원	○	×

정답 해설

④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인지에 대해 □□행정법원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둘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행정법원이 맡은 재판의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과 A 회사이다.
- ②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③ □□행정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둘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18. ②

지문 해설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고, B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C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답 해설

② 종교, 학문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방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③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의 공통된 실현 방안으로 '복수 정당제에 기반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등이 있다.

19. ⑤

정답 해설

⑤ 을이 사망할 경우 을의 상속인은 친족 관계가 있는 자녀 B와 D,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정이 있다. C는 정 의 자녀이고, 을이 C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을과 C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없다. 따라서 부적절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대해 '부적절'하다고 한 학생의 '판단 결과'는 옳다.

오답 해설

① 갑의 상속인은 친족 관계가 있는 자녀 A와 B,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병이 있다.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 A와 B가 있으므로 상속 2순위인 직계 존속 E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과 을은 이혼을 통해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을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한 학생의 '판단 결과'는 옳지 않다.

②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고, 정과 무의 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을 통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를 통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갑과 을의 이혼과 정과 무의 이혼은 모두 이혼 판결을 통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적절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다고 한 학생의 '판단 결과'는 옳지 않다.

③ 병의 A 입양은 친양자 입양이지만, 갑과 병은 법률혼을 했으므로 A는 친생부모 중 을과의 친자관계만 종료된다. 반면, 정 의 B 입양은 친양자가 아닌 일반 입양이므로, B는 친생부모와의 모든 친자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적절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한 학생의 '판단 결과'는 옳지 않다.

④ 갑의 사망 당시는 B가 성인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정은 B에 대해 친권이 없다.

C는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 해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14세+2세+a(a는 1세 미만) 즉, C는 성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은 성인이 아닌 C에 대해 친권이 있다.(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다고 한 학생의 '판단 결과'는 옳지 않다.

20. ④

지문 해설

주요 사법 기관인 B에 법적 자문을 요청한 A는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고,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연합 내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인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므로, A는 총회로 확정된다.

정답 해설

- 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이 강제성을 띠는 것과 달리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따라서 국제 연합의 회원국은 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총회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단,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ㄷ.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의 관할권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국 모두의 합의 및 동의에 따른 제소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갑국의 불법 영토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관할권을 얻었다면, 갑국과 을국 모두 제소에 합의하였을 것이다.

오답 해설

- ㄱ. 국제기구인 총회도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비상임이사국인지 상임이사국인지의 여부는 ㉠의 의결에 영향을 미친다.